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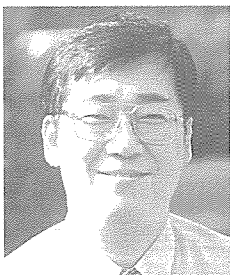
동료평가제를 생각한다

동료평가제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과학자가 동료들의 연구를 평가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선진 학문을 배워온 과학자들은 동료평가를 통하여 외국의 높은 학문수준을 유지시키고 선진 과학기술제도를 한국에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해왔다. 친분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 저명한 학술잡지일수록 엄격한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동료평가제(peer review system)는 과학기술 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과학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학문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동료들의 평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동료평가제는 오늘날 각종 전문 학술잡지의 심사위원들이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고 과학기술 업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과학기술정책 입안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저명 학술잡지서 실시

어떤 과학적 이론이 수용되는 데에는 대다수의 의견보다는 핵심적인 소수 과학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과학자들도 자신이 장안해낸 업적이 일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우선은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任敬涛

〈포항공대 교양학부 교수〉

17세기 말 과학 분야에서 학술잡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전문적인 학술잡지에 실리는 기준을 정하는 데에 동료 과학자들의 평가는 중요한 기준짓대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잡지일수록 엄격한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료로부터의 인정을 중요시하는 모습은 과학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논문을 출판할 때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양자역학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는 모두 뮌헨대학 재학시절부터 중요한 과학적 이론을 창안해서 출판할 때마다 대화나 서한으로 서로에게 문의한 뒤 학술잡지에 기고했다. 예를 들어 하이젠베르크는 동료인 파울리가 자신의 논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는 논문 투고를 잠시 유보했고, 그래도 꼭 투고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아주 조심하면서 학술잡지 편집인에게 논문 초고를 보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을 소개받을 때 많이 사용하는 추천서 형식 역시 동료평가제가 강화되면서 등장한 예에 해당한다. 추천서 양식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동료평가는 학문 분야내의 학파의 형성과도 밀접한 연결을 지니고 있다. 노벨상 추천 및 평가에 있어서도 동료평가가 수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료평가제는 연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과학기술에 대

한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외국에서 선진 학문을 배워온 과학자들은 동료평가를 통해서 외국의 높은 학문 수준을 유지시키고 선진 과학기술 제도를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동료평가제는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편파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평가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는 동료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업적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제로는 친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서구에서 이상적이던 동료평가가 학연과 지연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왜곡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친분 등 편파적 평가 문제

이외에도 동료평가제는 연구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전통적인 분야에 비해 학제간 분야 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동료평가제는 서구에서 약 한 세대 정도 이전에 형성된 전통적인 분야에는 유리하고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학제간 분야에는 불리한 면이 없지 않다. 사회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유형의 학문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들 새로운 유형의 학문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있는 학제간 분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동료평가제도에 바탕을 두고 학문적 업적을 평가할 경우에 주로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학제간 분야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 미래를 주도할 새로운 학문 분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는 힘들다는 데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연구비 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학제간 분야를 분명히 명기해 공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이런 학제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에서는 학제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소수의 학자들보다는 이미 과학기술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분야의 학자들이 평가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겉으로는 학제간 분야를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분야에 보다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미래의 지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동료평가방식과 아울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배합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의 미래를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과학문화 분야의 종사자, 혹은 각계 각층의 일반인들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방향을 정하는 데 부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동료평

가 뿐만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비전문가들의 평가도 광범위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와 연결된 환경공학 지원,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국방 과학기술 연구, 인간 복제 문제와 같은 생명윤리 문제가 개입된 과학기술 개발 등을 평가할 때에는 전문가 이외에 다양한 사회 대표들도 함께 평가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비전문가 안목 반영 필요

비전문가들이 과학기술정책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소수 엘리트들이 아니라 다수 대중이 정해야 한다는 소위 '과학기술 민주화' 움직임과도 부분적으로 연결을 맺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의 지원 방향을 정할 때 비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무척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이미 프랑스혁명, 소비에트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과학기술정책을 개혁하려다가 실패한 역사적 경험을 많이 보아왔다.

따라서 동료평가제도가 지닌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비전문가의 안목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이 국가의 과학기술문제 해결능력을 극대화시켜 정신적,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과학기술 평가방식도 어떤 식으로든 민주적인 방식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①7